



##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 Transfer Pricing & Customs Newsletter

삼정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1. 이전가격

#### 미국: 제6 연방순회항소법원은 APA 취소에 따른 40% 과태료에 대해 납세자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결

미국 제 6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Sixth Circuit )은 미 국세청의 두 건의 APA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취소와 관련한 분쟁에 대해 미연방조세법원의 결정을 일부 인정 및 일부 번복하여 모든 안건에 대하여 납세자의 주장을 수용하였음.

납세자와 IRS 는 2001 년부터 2010 년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과세 연도에 대해 두 건의 APA 를 체결하였음. APA 체결 후 몇 년 뒤, 납세자는 자료를 검토하여 일부 부주의한 계산 오류를 발견하였고 이를 IRS 에 고지 후 바로잡음

IRS 는 납세자가 2005 년과 2006 년의 과세연도 동안 APA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소하였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IRS 는

삼정 KPMG TAX 6 본부

19 Sept 2022

#### KEY CONTACTS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el: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el: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el: 02-2112-7939)

납세자의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을 반영하기 위한 이전가격과세조정(section 482)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음.

또한 IRS 는 2005 년과 2006 년 각 연도별 약 1,970 만 달러와 5,530 만 달러의 과소신고액과, section 6662(h)에 따른 각 연도별 약 1,430 만 달러와 3,730 만 달러의 과태료에 대해 추정세 통지서(A notice of deficiency)를 발급하였음.

납세자는 연방 조세법원에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여 추정세 통지서와 국세청의 APA 취소에 이의를 제기하였음.

2013 년 연방 조세법원은 APA 를 취소한 IRS 의 결정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판단하였음. 그 후, 연방 조세법원은 2019 년 의견에서 Section 6662(h)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될 Section 482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납세자는 과세연도에 대해 Section 6662 조에 따른 과태료에 대한 지불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한편, 연방 조세법원이 이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양측은 조세법원의 판결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항소하였음.

제 6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의견서를 통해 세무 절차(Rev. Proc.) 99-32 에 따라 납세자가 이중과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포함하는 제시된 모든 사안에 대해 납세자의 주장을 인정하였음.

연방조세법원은 납세자의 자체 오류 수정이 Section 482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세무 절차(Rev. Proc.) 99-32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제 6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그러한 수정이 사실상 Section 482 조정에 해당하므로, 납세자는 세무 절차에 따라 이중과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음.

#### 폴란드: 개정 법안 초안에 이전가격 규정 포함

폴란드 딜(Polish Deal)의 일환으로 제정된 법인세 조항을 개정하는 법안 초안이 2022 년 8 월 25 일 폴란드 하원에 제출되었으며, 첫 번째 독회는 2022 년 9 월 2 일에 예정됨.

해당 개정안은 2023 년 1 월 1 일부로 발효될 예정임.

폴란드 정부는 이전가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조세 피난처" 관할 구역에 위치한 법인과 거래에 대한 문서화 요건을 수정하는 상정안을 이미 발표하였음. 해당 상정안은 폴란드 딜(Polish Deal)의 일환으로 제정된 법인세 조항을 개정하고 있음.



**김태준 상무**

(Tel: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el: 02-2112-0277)



**김태주 상무(관세)**

(Tel: 02-2112-7448)



**김현만 상무(관세)**

(Tel: 02-2112-7542)

동 개정안에서는 기존 정상가격을 입증하는 문서화 요건에 조세피난처 거래에 대한 독립기업원칙 준수 의무 및 강화된 문서화 요건까지 포함되어 있음.

#### EU: 5개 EU 회원국은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공동성명 발표 (필라 2)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정부는 2022년 9월 9일에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글로벌 최저한세 (필라 2)를 규정하는 GloBE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완전한 의지를 표명하였음.

발표에 따르면 5개 EU 회원국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2023년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규칙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음. 이 성명서는 인플레이션 및 에너지 가격 상승 완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에 대한 자금 조달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도입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독일 정부의 발표 (2022년 9월 3일)를 기반으로 함.

앞서 유럽연합 경제재무위원회(ECOFIN)가 헝가리의 유보적인 입장으로 인해 수정 타협안에 대한 정치적 합의에 도출하지 못한 바 있음.

#### **KPMG 의견**

금번 성명의 주요 목표는 모든 EU 회원국의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지만 해당 국가들이 실제로 어떻게 필라 2를 이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 헝가리 또는 다른 EU 회원국이 오는 2022년 10월 4일 열리는 ECOFIN 회의에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가지 가능한 해결책은 향후 제안이 소위 “강화된 협력(enhanced cooperation)” 절차에 따라 채택되는 것임. 또는 EU 회원국들이 일방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될 것임.

또한 공동 성명서는 5개국이 2023년 중반까지 다자 협약에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시장 소재 관할 구역으로 재할당하기 위한 OECD 필라 1 솔루션의 금액 A 산정에 대한 작업을 완료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 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조심2021서6962, 2022.08.04

해외현지법인장의 영입과정에서 지급한 쟁점금원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1)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분체(粉體) 이송 시스템의 설계, 제작, 설치 및 시운전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aaa 등 4명의 인력을 영입하면서 영입대가(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기로 약정한바, 2009.11.3. aaa과 'OOO 현지법인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인 OOO현지법인을 설립하여 aaa을 현지법인의 장으로 영입하였고, 그를 제외한 3명은 청구법인으로 영입함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던 bbb은 2011년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자신이 보유하던 청구법인 주식 OOO주 상당의 매각대금 OOO원을 aaa에게 지급
- 이후 bbb가 청구법인을 피고로 하여 aaa 등 4명의 영입과정에서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자신이 지급한 금액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했고, 청구법인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bbb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영업외비용(소송손실)으로 회계처리함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bbb에게 지급한 화해금(소송손실) 중에서 OOO현지법인장 aaa의 영입대가에 해당하는 OOO원(이하 "쟁점금원"이라고 한다)은 OOO현지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이 아니라고 보아 손금불산입(3명의 청구법인 영입에 대하여는 손금인정)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경정·고지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 2) 청구법인 및 처분청 주장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주장
aaa 은 청구법인을 위하여 OOO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서 aaa 에게 쟁점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u>쟁점금원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u>	aaa 은 OOO 현지법인장으로 입사하는 조건으로 영입대가(사이닝보너스)를 요구하였고, 2009 년에 OOO 현지법인 법인장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 따라서 <u>청구법인이 aa 에게 지급한 영입대가는 OOO 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할</u>

<p><u>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임</u></p>	<p><u>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 19 조에서 규정하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음</u></p>
<p><u>쟁점금원은 000 현지법인 “설립 이전”에 “청구법인”과 aaa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쟁점금원에 대하여 설립되지 아니한 000현지법인의 인건비를 청구법인이 대납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된 것</u></p>	<p><u>쟁점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000현지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사업자이고, 000현지법인장 aaa의 영입을 위해 지출한 영입대가는 000현지법인이 부담했어야 할 성질의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는 관련 없는 비용이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u></p>
<p><u>aaa이 000현지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업무를 다수 수행하였고, 그 결과 수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바, aaa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수익은 사실상 대부분 청구법인에게 귀속됨</u></p>	<p><u>000현지법인장의 영입과 청구법인의 수익증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000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영업정보 수집, 구매업무 대행, 현지출장 용역 업무”를 대행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대가를 수취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이는 aaa의 영업활동 등이 청구법인의 수익증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000현지법인의 수익증대를 위한 것임</u></p>

### 3) 판단내용

- 청구법인이 쟁점금원의 지급근거라고 주장하는 쟁점계약상으로는 000현지법인의 설립뿐만 아니라 000현지법인에서의 법인장으로서의 근무 및 청구법인과 000현지법인 사이의 경영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쟁점금원은 aaa의 000현지법인 근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 청구법인은 aaa이 청구법인에 제공한 용역으로 현지법인의 설립을 들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 계약을 체결한지 7일 후

OOO현지법인이 설립되어 실제 aaa이 해당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OOO현지법인의 운영 및 근무를 상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은 OOO현지법인으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고 있고 OOO현지법인은 청구법인과 업무대행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받고 있어 aaa은 청구법인과 구분되는 OOO현지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바, 쟁점금원에 대해 OOO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3. 관세

#### 주요 국가의 통관제도 동향 및 대응방안- 2022 년 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내용 요약 (22.08.31)

2022 년 8 월 31 일, 관세청에서는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국에서 관세심사 강화 추세
-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인도 수입물품 모니터링 제도 시행 등 비관세 장벽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

#### **1. 미국 -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개요 및 향후 대응 방안**

##### **●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주요 내용**

- '22.6.21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시행 (미 관세법 Section 307 of the Tariff Act of 1903에 기반하여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반입 금지)
-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에 따라 수입물품이 위구르에서 생산되었다는 세관당국의 추정만으로도 통관보류(이후 불허) 가능
- 통관 보류된 경우 수입자는 1) 재수출, 2) 상품 폐기, 3)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자료(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제출 가능

### ● 통관보류 해제를 위한 절차

- [수입자 입증 책임] 수입자는 통관보류 받은 물품 수입을 위해서는 **30일 내 입증자료 제출**(과거 90일에서 축소)
-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관에서 자료불충분으로 인용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 및 소송 진행 가능하나, **관련 비용이 화주 부담이 원칙이며 쟁의 절차가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인용가능성 미비**할 것으로 예상
- CBP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당한 증빙서류(기업경영 실사정보, 공급망 추적정보, 공급망 관리방법 정보)를 제출해야 함

### ● 통관보류에 대한 대응방안

- **통관보류 해제 신청 인용 가능성이 낮으므로 예방이 최선**, 신장 위구르 지역 관련 상품을 피할 것
- C-TPAT(Account Manager/기업상담전문관 - AEO 공인기업 관할세관 소속공무원) 활용
- Due Diligence System
- Supply Chain Tracing Information
- Internal Control
- 신장 위구르 지역과 관련 없다는 정보 구비

## 2. 중국 - 관세 행정 개혁에 따른 무역원활화 및 물류장애 극복

### ● 중국 최근 개정 수출입 통관제도

- 중국의 RCEP 발효(22.1.1)
- 18종의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사전등록제도의 엄격한 시행(22.1.1)
- 일부 수입 동식물 제품에 대한 검역검사 권한 직속세관에 위임(22.1.1)

- 국경 간 전자 상거래 확대 및 전자 상거래 B2B 수출 지원, 수입물품 목록 조정
- 수출(부가)세 환급절차 간소화
- 관세 포탈 관련 자진신고 절차 완화(22.7.1-23.12.31)

### ● 중국의 관세행정 개혁과 기업지원 동향

- AEO 기업 확대 및 자격 획득을 위한 기업지원 확대
- 일선 세관의 수출입 기업의 RCEP 활용지원 강화
- 종합보세구역 관리방법 제정 시행(22.1.5), 종합보세구역 수리물품 목록 확대(21.12.31)
- 세관의 담보제도 개혁 시행(21.11.24)
- 중국의 외국선박 연안운송(카보티지, shao dai) 확대 시행
- 상표 지능인식 시스템을 통한 지재권 물품 신속통관과 지재권 보호
- **수입자동차 부분품 세관신고 절차 간소화(21.12.22):** 자동차 부분품에 대한 품명, 상표, 규격 등 표기방법을 엄격하게 규정한 자동차 부분품 표준신고 신고서 작성을 폐지

### ● 대중국 교역 관련 유의 사항

- **주요 원자재에 대한 필수검사대상 지정확대에 사전대응 필요** → 핵심원재료 및 중국 내 공급부족을 겪는 품목에 대해 상품검사 대상지정, 검사기간 확대 등 조치 확대 中
- 수출입 허가대상 물품의 주기적 변동에 따른 사전 대응 필요
- 수입 완제품에 대한 선별적 상품검사 강화 대응 필요 → 검사품목 및 기간 확대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및 로열티 등에 대한 심사 강화에 대응 필요** → **코로나로 인해 정체되어 있던 해관총서가 최근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심사를 강화하고 있음.**
-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수입물품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에 대응 필요



### 3. EU - 통관단일창구 개선 등 유럽연합 통관제도 동향

#### ● 對러시아 수출입 제재에 따른 수출입통제 中

- 제재품목 EU 회원국 경유(회원국내 이동) 금지, 러시아로 물품 판매, 공급, 수출 금지 등

#### ● 최신 EU 관세행정 동향

- EU 단일통관창구 구축 추진: 2025년까지 단일통관창구 구축을 추진 중 (현재 EU중앙집행위 관세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나, 각 국가별 시스템 사용하는 국가, 국가별 시스템+중앙집행위 시스템 사용 국가, 중앙집행위 시스템만 사용 국가 등 다양하게 운영 중)
- EU 수입통제시스템2(ICS2) 2단계 시행: 23.3.1부터 항공으로 EU로 또는 EU를 경유하는 모든 운송업체, 특송업체 및 우편업자 동 사전화물정보(ENS) 제출 의무(multiple filing제도) > 3단계 시행 시(24.3.1. 해상및내륙수로, 도로및철도 운송업자도 ENS 제출의무
- EU 특혜 원산지 등록수출자제도(REX): 캐나다, 일본, 영국, 베트남 등 FTA에서 채택된 특혜원산지제도로써 제3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원산지를 인증하는 시스템
- EU AEO 제도: 통관관련 AEOC(Customs)와 안전 관련 AEOS(Security)로 구분, 대부분 업체가 AEO와 AEOS 둘다 취득

### 4. 인도 - 비대면(Faceless)심사에 따른 인도 통관 어려움과 대응방안

#### ● 비대면 심사 개요

- 기존에는 화물 입항지 세관에서 선별, 서류심사, 물품 검사를 대면 처리했으나, 20.6.부터 통관절차를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Faceless Assessment를 시범 운영하고, 20.10부터 인도 전역 세관에서 확대 시행 중임
- 비대면 심사를 통해 항공화물의 80%, 해상화물 70% 이상이 기존보다 신속하게 통관되고 있으나, 통관 시스템 미비,

보완통보(Query)에 따른 대응자료 준비, 물품 검사 시 통관지체, 지역간/직원간 업무 편차에 따라 통관 애로 발생 多

### ● 비대면 심사 대응방안

- 각 품목별 관리규정, 세율정보, 각종 승인 허가 사항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오타 등 사소한 오류도 모두 보완통보(Query)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수입자료 관리가 필요
- 검사비율 완화, 담보 면제, 직반출 등 통관혜택이 많은 AEO인증 획득 및 유지

### ● 최근 인도 관세 동향(관세 조사, 수입물품 모니터링 강화)

- **관세조사 강화:** 만성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원산지 관리 강화 추세, 관세조사 시 압수수색, 직원소환, 자료요구 등 심사 강화, 세관의 자의적 품목분류, 사전 벌금 납부 유도(한국 기업 약 700억원 벌금 납부)
- **수입물품 모니터링 제도(Import Monitoring System; IMS):**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현황을 감시하기 위한 인도의 비관세 장벽으로, IMS 지정품목은 수입신고 전에 모니터링을 위한 별도 정보를 세관에 신고해야 함

종류	대상제품	HS Code	시행일	비고
철강(Steel)(SIMS)	철강제품	72, 73, 86류	19.12.11	최초 도입
석탄(Coal)(CIMS)	석탄	2701	21.04.01	
비철금속(NFMIMS)	구리, 알루미늄	74류, 76류	21.04.12	
직접회로(CHIMS)	반도체 직접회로	8542	21.10.01	
종이(Paper)(PIMS)	종이류	48류	22.10.01	시행 예정

→대상품목인 경우 사전등록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 (거래량당 수수료 납부)

## 5. 일본 - 공급망 강화를 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방안

### ● RCEP 활용 현황

- 22.1. 발효 후 각 세관에서 원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RCEP 적용 수입물품 대부분이 중국발 화물(93.7%)
- 한국산 물품의 경우 플라스틱제품>화학품>황동제품 순으로 RCEP 적용이 많음

### ● 사전심사 제도(Advance Ruling)

- 수입 전에 수입 관계자가 원산지, 품목분류 등에 세관으로부터 회답을 받는 제도로써 유효기간 3년
- RCEP 원산지 관련 활용 가능

### ● RCEP 원산지증명서 오류 빈번하나 타 FTA협정과 달리 우선협정세율을 적용하고 사후 검증한다는 원칙 부재

[활용가능제도] 수입허가 전 반출제도(Before Permit; BP):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활용 가능. 다만, 관세 상당 담보액 납부하고 세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반드시 수입신고 시 특혜관세 적용 받겠다는 의향 표시 필요

### ● 발효 예정인 통관 관련 법령

- 수산물 유통 적정화제도(22.12월 시행 예정), 식품포장재 포지티브리스트제도(25년 시행 예정)

[Privacy](#) | [Legal](#) | [Unsubscribe](#)  
INTERNAL USE ONLY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

[kpmg.com/socialmedia](https://kpmg.com/socialmedia)



[kpmg.com/app](https://kpmg.com/app)

